

친일 청산에 대한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채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는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분석하였다. 친일 관련 6개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총 266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전반적 보도 현황을 양적 분석하였다. 키워드로는 친일이 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족반역, 간상배, 일제잔재, 부일협력, 반민족의 순이었다. 두 신문은 관련 기사를 대부분 비중있게 다루어 전체의 43.2%가 면톱이나 부톱으로 보도되었다. <동아일보>의 정보원은 우익과 군정 당국에 치우쳤으나 <조선일보>는 중도와 좌익의 정보원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친일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여 두 신문 논조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두 신문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과거의 친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대하며 친일을 청산하려면 그 대상 설정도 매우 어렵고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어 당면 목표인 독립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될 터이니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 두 신문의 주된 논지였다. 신탁 통치나 미소 공위 등 주요 사안에서 <동아일보>는 우익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였으며 반면 <조선일보>는 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KEYWORDS 언론사, 미군정기, 동아일보, 조선일보, 친일청산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bchae@pusan.ac.kr

1. 문제의 제기

친일 청산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시시포스의 바위 같은 문제다. 해방 이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중요한 국면에서 아직도 사회적 이슈가 되곤 한다. 최근에도 2015년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처리가 국민적 기대에 못 미치면서 이 문제가 다시금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오랜 세월이 걸쳐 여러 차례 이슈가 되는 것은 해방 직후 제 때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방과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제 식민 잔재의 청산이었다. 36년간에 걸친 식민 지배는 한국의 사회 질서와 구조에 여러 가지 깊은 상처를 남겼기에 이를 청산,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식민 잔재 중에서도 친일의 청산은 최우선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오늘날까지 논란과 갈등이 이어지게 된 것이다.

오히려 미군정을 거치면서 친일 행위를 했던 많은 인사들이 기득권층으로 편입되었다.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반민특위도 아무 성과없이 무산되면서 한국 사회의 정관계를 비롯하여 각 분야에서 실력자나 원로로 자리잡게 되었다(이준식, 2005). 이와 함께 친일 문제는 더 이상 거론되어서는 안되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게 된 것이다. 물론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득권의 벽에 막혀 오랫동안 사회적 관심사로 확산되지 못했다.

언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해방 이후 복간되어 한국 사회의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하면서 이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어려워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이 신문들은 나서서 자신들의 과거 행적을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역사로 미화하였다. 1950년대 이후 창간 기념일이면 특집호를 발행하여 자신들의 일제기 탄압 사례를 들면서 식민 지배에 저항했던 투쟁의 역사로 의미를 부여하며 민족지 신화를 만들어 나갔다(채백, 2008, 10~18쪽).

이러한 논의 구조에서 최민지의 저술(1978)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제기에 발행된 두 신문의 지면을 분석하고 총독부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이 저술은 일제의 탄압에 저항한 투쟁의 역사라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최민지는 두 신문의 탄생을 일제 정책의 산물로 보면서 초창기부터 총독부와 타협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특히 1930년대 후반 두 신문이 보여준 친일의 양상을 지면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학계에서 비판적 시각의 논의들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비판적 논의는 소장 연구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이고(예컨대 김현대,

1987; 배진한, 1988; 강양욱, 1988 등) 기성 학계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언론의 친일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하게 된 것은 6월항쟁 이후 활성화된 시민 단체들에 의해서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선일보 반대운동이 시작되고 2000년대 들어서는 언론 개혁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도 나서게 되었다(채백, 2015, 506~507 쪽). 특히 2005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친일 문제가 더욱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대표를 지낸 김성수와 방응모가 친일 인사 명단에 포함되자 두 신문은 소송을 제기하고 지면을 통해 연일 정부를 공격하는 등 뜨거운 양상을 보였다.

시민 사회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에는 일제기 언론의 친일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예를 들자면 최영태, 2004; 장신, 2005, 2009 등). 이준식(2005)은 이처럼 언론의 친일 문제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이유를 해당 신문들이 현재까지 대표적 언론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신문의 친일 문제가 거론되면 극단적인 의견 대립이 벌어지곤 하는 상황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이 주제를 회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일제기 언론의 친일에 대한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지 신화가 풍미하게 되었던 맥락을 다시금 되짚어보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친일 청산의 최초 기회라 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미군정 당시의 시대적 과제로서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하였는가를 규명해보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군정기 두 신문의 친일 청산 관련 보도를 대상으로 내용 분석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두 신문의 입장과 태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만큼 보도량이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적 분석을 통해 전반적 현황을 정리해보고, 이 시기 친일 청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이슈를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통해 두 신문의 보도 태도를 규명해보았다.

친일 청산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필수적인 시대적 과제라 할 것이다(이준식, 2005). 언론 분야의 친일 청산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는 이 작업은 한국 언론사 연구에서 아직 여백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채우는 시도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일제기 언론의 친일 행태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고 오히려 민족지 신화로 풍미하게 된 맥락을 재규명함으로써 언론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미군정기 친일 청산 문제의 전개

먼저 미군정기에 친일 청산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 미군정의 친일파 재등용 정책

해방 이후 친일 청산의 과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정책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군정은 행정의 진공 상태를 우려해 일제기의 관리들을 그대로 등용하였으며 이승만 정권도 인재 부족을 이유로 친일 세력을 육성했다(길진현, 1984, 12쪽).

강대국의 분할 점령 정책에 따라 남한에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당초부터 친일파를 온존시키며 활용할 방침이었다. 1945년 8월 26일 미국무성은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참모진을 한국의 행정에 활용할 것을 대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같은 해 9월 7일 태평양 방면 미 육군 총사령관 맥아더도 포고 제1호를 통해 정부·공공단체에 종사하는 자는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종래의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미국의 친일파 활용 정책에 따라 미 군정청 행정 관료는 주로 친일파와 그 비호 집단으로 알려진 한국민주당 계열에서 충원되었다. 경찰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일제기 경찰 출신들이 요직을 포함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1946년 11월 당시 경위 이상 총 1157명 중 82%인 949명이 일제기 경찰 출신이었다고 한다. 군대도 마찬가지로 광복군 출신은 소수에 그쳤고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다수를 점하였으며 요직도 대부분 이들이 차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미군정의 친일파 재등용을 통해 남한 사회는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석구석에서 친일 인맥이 형성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말았다(이강수, 2003, 35~36쪽).

2) 신탁통치 국면 이전의 친일 청산 논의

해방 직후부터 다양한 정치 세력들에 의해 친일 청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대한독립협회는 1945년 11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친일파와 민족반역자 실정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조선일보, 1945, 11, 27, 2면) 12월 초에는 민족반역자 규정을 발표하였다(중앙신문, 1945, 12, 10, 2면).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도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에 대해 엄단할 것임을 천명하였다(민주중보, 1945, 12, 11, 사설).

이강수(2003, 42~46쪽)는 이 시기 친일 청산 논의가 세가지 방향에서 논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첫째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친일파들의 정치적 활동을 배제하는 것이었다. 일찍이 1941년 한국독립당이 발표한 <건국강령>에서 이러한 규제가 거론된 이래 1945년 11월에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¹⁾에서도 친일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하였다. 이후 이는 친일파 숙청론의 기본 조건이 되었다.

두 번째는 일제 시기 사회 구조의 개혁을 전제로 하였다.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한국 사회의 구조를 혁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변화시켰기에 해방과 함께 민중들의 혁명적 분출이 필연적이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박명림, 1996, 43쪽). 이러한 상황에서 해방 직후 친일 청산 논의에서는 친일파와 일본인의 재산을 몰수하여 그 사회적 및 경제적 기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었다. 1945년 8월 28일 열린 건국준비위원회의 창립 대회를 비롯하여 조선공산당, 한국독립당 등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였다.

세 번째로 친일파 숙청은 신국가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친일파를 숙청하여 친일을 청산하는 것이 새로운 민족국가 건설의 기본 과제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해방 직후의 한국 사회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는 식민 지배의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해방과 함께 좌익 세력이 건준을 건설하고 이어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며 발 빠르게 정국에 대응한 반면 우익 세력들은 정세의 흐름을 주시하며 관망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기의 행정 때문에 친일파로 지목될 것을 우려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군의 진주와 함께 우익 세력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인공 타도’와 ‘중경 임시정부 추대’를 표방하며 1945년 9월 7일에는 국민대회준비회와 중경 임시정부 및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9월 16일에는 한국민주당을 결성하였다. 당시 미군정의 정치 고문은 친일파들로 구성된 한민당의 존재에 대해 “정치 세력 중 가장 고무적인 요소는 연로하고도 보다 교육받은 한국인들 가운데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서울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일제에 협력하였지만 그러한 오명은 결국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가장 큰 단일 그룹으로 임정의 환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한민당의 의도가 임정을 추대하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후에 미군정이 임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은 임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박태균, 1993,

1) 인민위원회는 해방과 함께 출범한 건국준비위원회가 변환된 조직이다. 1945년 9월초 인민공화국 선포를 계기로 각 지역의 건준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변환을 시도하여 11월에 서울에서 전국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가 개최되었다(박명림, 1996, 40쪽).

183~184쪽).

이 시기 언론 부문에서도 친일 청산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1945년 11월 20일 인민공화국이 주최한 전국인민대표자 대회를 우익 단체가 습격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를 모 정당의 사주를 받은 테러 행위라고 좌익 신문들이 비난하였다. 다음날 조선건국청년회 등 10여개 우익 단체들에 의해 좌익 신문 경영주와 기자들을 공격하는 벽보가 종로 네거리 에 붙고 전단이 살포되었다. ‘악덕 기자에게 경고함’이라는 제목의 전단은 “신문기자 중 과거에 일본 제국주의의 주구로서 황도주의를 선전하고 총독부 관리들의 공사 총견이던 자로서 소위 인민공화국을 지지한다면 여등의 죄악은 한층 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김을한, 1975, 211~213쪽). 바로 언론계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 처단의 직접적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다. 청년 단체의 대립 속에 상대 진영을 비난, 공격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당시 친일 청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분위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행위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1945년 12월 1일 기자들 모임인 조선신문기자회²⁾가 친일 청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날 경남지부 결성식에 모인 기자들은 민족의 완전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의 장애물은 민족 반역자들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하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또한 1주일 내에 민족 반역자에 대한 선언문을 도내 각 신문에 게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신문기자회 경남지부는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친 끝에 12월 9일 민족반역자를 성토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경남지부는 도내 200여 명의 회원을 동원하여 8·15 이전과 이후의 민족반역자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내년 1월 하순경에 팜플레트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채백, 2012, 262~264쪽).

이 선언에 대해 <민주중보>는 바로 이튿날인 12월 11일자 사설에서 ‘기자회에 일언’이라는 제목으로 환영의 뜻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사설에서 <민주중보>는 “경남 기자회가 민족반역도를 성토한다고 하여 반다시 기자회견에는 한사람도 민족반역도가 업다는 것은 아닐 줄 안다. 동 성토문 중 ‘일본 군국주의의 사상적 대변자인 일부 문화인’ 운운하는 곳에 만일 과거에 신문기자로 지나친 반역 행위를 가졌든 자가 있다면 이곳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업슬줄 안다”고 하여 친일파 청산에 언론계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당초 경남지부는 1946년 1월

2) 조선신문기자회는 1945년 10월 23일에 열린 전조선신문기자대회에서 결성된 언론인 단체로서 좌익이 주도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성명도 채택되었다(박용규, 2007, 139~140쪽).

까지 반역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매듭짓겠다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곧이어 터져 나온 신탁 통치 문제로 극심한 대결 국면이 전개되면서 친일 청산의 과제는 묻혀버리고 말았다.

3) 신탁통치 국면 이후의 친일 청산 논의

1945년 말 한국 사회의 정국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12월 27일자 언론에 사실과 다르게 보도된 신탁통치 관련 뉴스³⁾가 한국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들면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익의 첨예한 대립 국면이 조성되었다. 잘 알려진 대로 우익은 신탁통치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이었으며 반면 좌익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좌익과 우익이 찬탁과 반탁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전개되었다.

소용돌이 속에서 친일 청산 이슈는 파묻혀 버렸을 뿐만 아니라 변질되고 말았다. 항일이나 친일이나의 대립축이 친소냐 반소냐, 친공이나 반공이나의 대립으로 환치되는 이 데올로기 지형의 전위가 빚어지게 된 것이다. 김구를 중심으로 한 임시정부 세력이 애국과 독립을 내세우며 반탁 운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여기에 우익의 친일 세력도 합류하여 애국 운동에 앞장섬으로써 소쟁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박명림, 1996, 140~141쪽). 이러한 대립 국면에서 찬탁은 매국노이고 민족 반역자이며 반탁은 반공, 반소로서 곧 애국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친일 청산이라는 과제의 의미가 전화(김영희, 2000, 55쪽) 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친일 청산 논의의 맥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1946년 2월 좌익 정당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민족전선⁴⁾(이하 '민전'이라 줄임)이 친일파의 범위를 구체화하려 시도하였다. 혼란 상황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탁치 정국에서 친일 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방 이후의 민족 반역자까지 포괄한 이 규정은 '황민화운동, 내선융화운동, 지원병, 학병, 징용, 창씨 등의 문제에 있어서의 이론적, 정치적 지도자'도 포함함으로써 친일의 문제가 언론 분야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민전이 제시한 구체적인 친일파의 범위는 이후 각 단체의 친일파 규정의 근간이 되었다(이강수, 2003, 47~50쪽).

3) 당시 언론들의 오보에 대해서는 김영희(2000), 정용욱(2003), 이완범(2005), 김동민(2010) 등을 참조하기 바람.

4) 이 단체는 1946년 신탁통치를 둘러싼 좌우익의 대립이 첨예화되어가며 우익이 2월 8일 이승만, 김구 중심으로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결성하여 반탁운동을 주도하자 이에 맞서 좌익 진영이 결성한 단체였다. 여운형과 허현, 박현영, 김원봉을 의장단으로 하여 2월 15일에 출범하였다(강만길, 1984, 201쪽).

1947년에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하 ‘입법의원’이라 줄임)이 친일 청산을 위해 제정한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이하 ‘특별조례’라 줄임)가 쟁점이 되었다. 1946년 12월 설치된 입법의원은 당시 친일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았기에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시도하였다. 1947년 3월 13일 입법의원에서 상정된 특별조례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여러 차례 수정되는 진통 끝에 1947년 7월 2일 통과되었다. 이 조례의 부일협력자 항에는 ‘일본 국책을 추진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단체 및 언론기관의 지도적 간부’를 1차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조례는 당시의 미 군정장관 대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인준을 거부함으로써(동아일보, 1947, 11, 28, 1면) 빛을 보지 못하고 말았다. 이 시도는 당시에는 무산되고 말았지만 정부 수립 직후 반민특위 출범의 밑바탕이 되었다.

친일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한독당을 비롯한 거의 모든 정당 단체들이 친일파 처벌을 정강으로 내걸었다. 반면 한민당과 이승만은 이를 외면했으며 친일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한민당과 이해를 같이 했다(길진현, 1984, 16쪽). 이승만은 1946년 11월 11일 성명을 통해 “친일파 문제로 이론이 많으나 이런 문제를 지금 제출하는 것은 민심만 혼란케 하며 통일을 방해하니 공연한 시비를 말고 국권을 회복한 후에 법률에 의하여 조처하는 것이 순서적이다”라고 밝혔다(독립신보, 1946, 11, 12). 이러한 언명이 이승만과 한민당 중심 우익 세력의 친일 청산에 대한 기본 입장이 되었다.

1947년에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이하 ‘공위’라 줄임)를 중심으로 친일파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달아올랐다.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에 따라 1946년 3월에 구성된 공위는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함께 협의할 정당과 사회 단체를 선정하는 문제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공위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수락하는 단체만을 협의 대상으로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반탁 운동에 참여했던 우익 정당과 단체들의 참여가 문제되면서 1946년 5월 결렬되고 말았다.

1947년 공위가 재개되면서 협의 대상 단체의 문제가 다시금 떠올랐다. 논란 끝에 반탁 운동을 의사 표시의 자유로 볼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의해 우익 단체들의 참여도 허용되었다. 그러나 참가 신청 단체가 남한에 425개 북한에 36개였으며 각 단체에 등록된 총 회원 수는 7천만 명에 이르러 당시 남북한 인구의 2배에 달했다(강만길, 1984, 170~172쪽). 이에 대해 좌익 진영에서는 우익의 친일 세력이 대거 참여하여 공위를 무산시키려고 한다며 친일 세력의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었다.

1947년 6월 19일에 창간된 남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력인민>은 창간호부터 이 문제로 우익 세력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창간호에서는 당의 핵심 인사 이승엽의 글을 통

해 6월 10일에 한민당이 공위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친일도당 한민당이 공위를 파괴시키려 한다며 인민의 힘으로 분쇄하자고 주장하였다. 민전 80여개 단체는 1947년 7월 6일 미소공위 협의 대상 단체에 '친일반탁모리 유명단체'가 대거 포함되었다며 이들을 제외하라는 성명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성명서에서 이 단체들은 "우리 민전은 '반탁'의 거짓 구호 밑에서 지금까지 결사적으로 3상 결정을 반대하던 집단, 친일파의 집단, 유명한 집단들 곧 한민, 한독 독촉 계열을 일제히 공위 협의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고 강조하였다(조선중앙일보, 1947, 7, 8). 남로당의 허현과 근로인민당 여운형, 좌우합작위원회의 김규식, 인민공화당 김원봉 등 4개 정당 대표도 반대 성명을 발표하여 "반탁친일본자 배제코 혼란과 파렴치를 광정(匡正)하라"고 주장하였다(우리신문, 1947, 7, 9).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와 산하의 각 산업별 노동조합도 1947년 7월 8일 성명을 발표하여 "1급 친일파 민족반역자 장덕수가 공위 대표로 나오는 한민당은 모다 친일파 집단 이거니와 반탁 테러의 괴수 김구를 당수로 하는 한독당, 한민 한독의 일흠만 바꿔 부친 독촉, 그들의 고용병 대한노총이야말로 파괴 살상 강도 약탈을 본업으로 하고 우리 노동조합을 파괴하라는 직업적 폭력단"이라며 이들을 공위에서 배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전국노동자신문, 1947, 7, 18). 이때 좌익이 우익 단체들의 배제를 주장한 것은 이미 남한만의 총선거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은 우익이 대거 참여하여 결국 공위의 무산을 노린다는 것이었다(문화일보, 1947, 7, 1, 사설).

2차 공위가 재개되던 1947년 5월의 국제 정세는 유럽과 중동, 중국, 인도차이나 등 세계 곳곳에서 미소의 대결과 냉전은 악화된 상황으로서 두 나라는 모두 공위가 성공하리라는 기대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은 당시 남한 단정 수립 계획을 구체화하여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우익 단체들의 테러는 더욱 극심해졌으며 그해 7월부터는 미군정이 직접 나서 좌익 정당과 단체, 그리고 언론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어 1947년 9월 23일의 유엔총회에서는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제의 유엔 상정을 가결함으로써 한국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되어 제2차 미소공위는 10월 17일 완전히 결렬되고 말았다(양동주, 1987, 125~129쪽).

이로써 친일 청산의 문제가 미군정기 한국 사회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장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되고 말았으며 이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로 넘겨졌다. 그러나 1948년 10월에 출범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도 별다른 성과 없이 1년 만에 해체되면서 친일 청산의 과제는 오늘날까지도 한국 역사에 큰 부담으로 남고 말았다.

3.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보도 현황

1) 양적 분석의 방법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보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양적 분석을 하였다. 두 신문의 데이터베이스(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http://newslibrary.naver.com>; 조선일보 아카이브,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를 이용하여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을 통해 보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키워드는 ‘친일’뿐만 아니라 당시에 통용된 여러 관련 어휘들, 즉 ‘반민족’, ‘민족 반역’, ‘부일 협력’, ‘간상배’, ‘일제 잔재’의 여섯 가지다. ‘반민족’과 ‘민족 반역’은 식민지 시절의 친일 중에서도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일컫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지만 당시의 국면에서 독립 국가 건설에 방해되는 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중앙신문, 1946, 2, 2). ‘간상배’라는 용어도 당시의 혼란스런 정국에서 매점 행위 등을 통해 사욕을 채운 모리배들을 지칭하면서 과거 친일파들이 해방 이후에도 계속 나쁜 짓으로 사욕을 채운다고 비난하던 용어다. ‘부일협력’은 1947년 입법의원에서 만든 특별조례의 명칭이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법률조례’로 정해지며 많이 사용되었다. ‘일제 잔재’라는 용어는 주로 제도적, 문화적 차원의 청산에 초점을 맞출 때 많이 사용되었다.

검색 결과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된 기사는 <동아일보>가 216건, <조선일보>가 50건이었다. 두 신문의 검색 기사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객관적 현실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신문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능력 차이 때문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의 경우 원문이 다

표 1.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기사 현황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발행연도	1945년	12 5,6%	5 10,0%	17 6,4%
	1946년	89 41,2%	12 24,0%	101 38,0%
	1947년	89 41,2%	26 52,0%	115 43,2%
	1948년	26 12,0%	7 14,0%	33 12,4%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5,640, df = 3, p > .05$

입력되어 검색하면 거의 대부분이 추출되지만 <조선일보>의 경우는 제목에 나오는 키워드만이 검색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두 신문 차이의 검증은 힘들고 전반적 경향만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적 분석의 주요 결과

친일 청산 관련 기사는 1946년과 1947년에 두 신문 모두 80% 내외가 집중되었다. 이는 두 신문 모두 1945년 하반기에 복간되었으며 1948년도 8월까지만 분석 대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두 신문에서 검색된 키워드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이 키워드 분석에서는 하나의 기사에 2개 이상의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경우들도 모두 포함하였기에 전체 사례 수는 341개에 이른다. 두 신문 모두 ‘친일’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민족 반역’과 ‘간상배’였다. 전술한 대로 과거의 친일보다 당시의 행위에 초점을 맞춘 이 용어들이 많았던 것은 후술하겠지만 두 신문이 과거보다 당시의 문제를 더 중요시하자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기 두 신문의 친일 관련 보도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표 3>과 같이 전체의 43.2%가 면톱 혹은 부톱의 위치에 편집되었다. 이는 친일 청산이라는 이슈가 당시 사회의 최대 관심사이자 이슈 중의 하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관련 기사의 유형을 분석한⁵⁾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두 신문 모두 가장 큰 비중이었으며 사설/내부 칼럼이 그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친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사설로는 1947년 4월 30일자에서 후술할 입법위원의 특별조례에 대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니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자는 사설이 유일했다. 다른 사례들은 당시 사회의 다른 문제들을

표 2.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키워드 현황

구분	친일	민족반역	간상배	일제잔재	부일협력	반민족	총계	
신문	동아	63 24.3%	56 21.6%	61 23.6%	48 18.5%	18 7.0%	13 5.0%	259 76.0%
	조선	27 32.9%	22 26.8%	13 15.9%	3 3.6%	13 15.9%	4 4.9%	82 24.0%
	총계	90 26.4%	78 22.9%	74 21.7%	51 14.9%	31 9.1%	17 5.0%	341 100.0%

5) 표에서 텍스트는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나 법안의 세부 내용 등을 보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도 그 내용의 특징을 뽑아서 제목을 붙이고 서두에 리드 성격의 문장이 포함된 경우들은 스트레이트로 분류하였으며 제목을 ‘특별조례 전문’이나 ‘수정안’이라 붙인 사례들은 텍스트로 분류하였다.

표 3.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보도의 중요도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기사 위치	톱	64 29.6%	10 20.0%	74 27.8%
	부톱	34 15.7%	7 14.0%	41 15.4%
	중우	29 13.4%	17 34.0%	46 17.3%
	중좌	53 24.5%	11 22.0%	64 24.1%
	하우	24 11.1%	1 2.0%	25 9.4%
	하좌	12 5.6%	4 8.0%	16 6.0%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15.469, df = 5, p < .01$

논하면서 친일 청산과 관련된 언급이 이뤄진 경우들이다. 예를 들면 경찰 제도의 쇄신(1946, 3, 15)과 교육 민주화(1946, 4, 22)를 위해서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간상배의 암약에 더욱 강력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촉구한 사설(1946, 2, 12) 등이 있다.

반면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보다 적극적이었다. 1945년 12월 3일자에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라는 제목으로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을 비롯하여 1947년 3월 8일과 9일자 사설에서는 입법위원의 조례에 대해 정부 수립 이후에 시행하고자 주장하였다. 1947년 11월 2일자에서는 친일파의 공민권 제한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1947년 10월 9일자에서도 새 나라 건설을 위해서는 일제 잔재의 청산이 필수적이라 주장하였다.

외부 칼럼은 <동아일보>가 <조선일보>보다 더 많았다. 예컨대 1947년 1월 7일자에서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로 선회한 조선공산당의 입장을 찬탁이며 민족 반역이라 비판한 김창숙의 기고를 게재하였으며 1947년 4월 27일자에서는 입법위원의 특별 조례가 문제가 많으니 근본 수정이 안되면 철회하자는 김준연의 칼럼을 게재하였다. 사설이나 내부 칼럼으로 다루기 미묘한 문제들을 외부 인사의 글을 통해 간접적으로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표 4.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기사 유형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기사 유형	스트레이트	145 67,1%	40 80,0%	185 69,5%
	사설/내부 칼럼	28 13,0%	6 12,0%	34 12,8%
	외부 칼럼	9 4,2%	1 2,0%	10 3,8%
	텍스트 (성명서, 법안 등)	21 9,7%	3 6,0%	24 9,0%
	기타	13 6,0%	0 0,0%	2 ,8%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5.136, df = 7, p > .05$

표 5.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친일 관련 기사의 정보원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정보원	군정당국	58 26,9%	9 18,0%	67 25,2%
	정당(연합)	40 18,5%	9 18,0%	49 18,4%
	사회단체/기관	16 7,4%	3 6,0%	19 7,1%
	정치인/관료/학자	19 8,8%	6 12,0%	25 9,4%
	입법의원	28 13,0%	14 28,0%	42 15,8%
	외국인/외국언론	7 3,3%	2 4,0%	9 3,4%
	불명	46 21,3%	6 12,0%	52 19,5%
	기타	2 ,9%	1 2,0%	3 1,1%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9.955, df = 8, p > .05$

표 6.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친일 관련 기사 정보원의 정치 성향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정보원 성향	군정 당국	58 26.8%	9 18.0%	68 25.6%
	좌익	9 4.2%	8 16.0%	17 6.4%
	중도	37 17.1%	17 34.0%	54 20.3%
	우익	52 24.1%	5 10.0%	56 21.1%
	불명	60 27.8%	11 22.0%	71 26.7%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20.047, df = 4, p < .001$

관련 기사들의 정보원으로 가장 많았던 것은 <동아일보>는 군정 당국이었으며, <조선일보>는 입법의원이었다. 1947년 입법위원의 특별 조례를 둘러싸고 당시 사회에서 여러 논란들이 뒤따르면서 신문 지면에도 자주 등장하였다.

정보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해 보았다. 여기서 군정 당국은 별도로 하였으며, 좌익과 우익이 함께 참여한 좌우합작위나 입법의원 등은 중도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동아일보>는 군정 당국과 우익이 1, 2위로서 전체의 50.9%를 차지하였다. 반면 <조선일보>는 중도가 34.0%로 가장 많았고 군정 당국(18.0%)이 뒤를 이었다. 좌익 정당이나 단체가 보도된 비중을 보면 <동아일보>가 4.2%에 그친 반면 <조선일보>는 16.0%를 차지하여 우익 세력의 비중보다 높았다. 이는 <동아일보>는 우익 세력에 편향된 경향인 반면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균형된 입장이었음을 말해 준다.

두 신문 친일 관련 기사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7>과 같이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친일 관련 키워드들이 언급되었다. 주제 면에서도 두 신문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주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정치 문제를 다룬 기사(25.4%)가, <조선일보>는 친일 청산 관련 활동에 관한 기사(38.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아일보>에서 친일 청산 활동에 관한 기사는 22건(10.2%)으로서 정치 문제와 경제 문제, 입법의원 조례 관련 기사의 뒤를 이어 4위였다. 이는 <동아일보>는 대부분 연관된 다른 주제의 기사에서 친일 문

표 7.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친일 관련 기사의 주제

구분		동아 빈도(%)	조선 빈도(%)	총계 빈도(%)
주제	신탁 통치 관련	11 5.1%	0 0.0%	11 4.1%
	좌우 합작 관련	8 3.7%	0 0.0%	8 3.0%
	입법위원의 조례 관련	24 11.1%	17 34.0%	41 15.4%
	미소 공위 관련	7 3.2%	1 2.0%	8 3.0%
	친일 청산 관련 활동	22 10.2%	19 38.0%	31 11.7%
	군정의 입장 관련	13 6.0%	0 0.0%	13 4.9%
	정치 문제 일반	55 25.4%	7 14.0%	58 21.8%
	경제 문제	40 18.5%	5 10.0%	45 16.9%
	사회/문화	8 3.7%	1 2.0%	9 3.4%
	총선거 관련	18 8.3%	0 0.0%	18 6.8%
	기타	10 4.6%	0 0.0%	10 3.8%
	총계	216 100.0%	50 100.0%	266 100.0%

$\chi^2 = 62.829, df = 12, p < .001$

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형태가 많았던 반면 <조선일보>는 친일 청산의 문제를 직접 주제로 다룬 사례도 많아서 더욱 적극적이었음을 말해 준다.

4. 미군정기 친일 청산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미군정기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입장을 분석하

기 위해서는 당시 지면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친일 청산 문제가 핵심 이슈로 부상되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두 신문의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질적 분석을 통하여 비교해 보았다.

1) 복간 직후 두 신문의 보도 태도

(1)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조선일보>는 1945년 12월 3일자에서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여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사설은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의 범위 설정과 구분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민족적 내지 계급적 혁명자로서 일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내려온 이땅에서 생명을 보존한 그 어느 누가 뚜렷한 결론을 어들 수 있겠는가”라면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사회적 역사적 입장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민족반역자 친일파의 규정은 그것이 다만 과거에 있어서 친일하고 또는 민족을 배반하였다는 분자뿐만 아니라 현재의 역할에서 대부분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방 직후 민족 통일을 방해하거나 군정과 인민을 이간하는 자, 모리와 경제 교란을 일삼는 자들을 비롯해서 파시즘을 획책하는 자들도 민족 반역자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설의 핵심은 식민치하 친일의 범위 설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적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의 독립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자들을 중심으로 청산하자는 주장이다.

1945년 11월 27일자에서는 ‘친일파 반역자 실정조사회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독립협회가 조사회를 설치하여 “사리사욕을 쫓는 단체와 개인을 조사하여 신국가건설에 이바지하고자”한다고 보도하였다. 같은 해 12월 9일자 1면에서는 대한독립협회가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의 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을 인용, 보도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8.15 이전의 친일파 민족반역자 등은 이미 그 존재가 너무나 세인이 공인하는 바 잇슴으로 그들은 금반 조사에서 제거한다”를 시작으로 친일파 민족 반역자가 해방 이후에도 정치 활동에 나서거나 미군정과 한국민 사이를 이간하는 자, 사적 이익을 위해 경제를 교란하거나 적산을 무단 점거한 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 항목으로 일제기 총독부나 경찰에서 일정 직급 이상을 역임한 자들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2)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

<동아일보>는 이 기간 사설로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다. 1945년 12월 2일자에서는 2면

톱 위치에 ‘당면한 우리의 신호(信呼)’라는 코너를 통해 당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시대적 과제들을 정리하였다. ‘총력을 일점에 집결/완전한 자주권 획득하기까지/독립 축성 시책에 협력하자’라는 제목으로 독립 국가 건설에 모든 역량을 모으자는 요지의 이 글에서 <동아일보>는 친일 청산의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말미에서 잘못된 과거의 반성과 청산이 필요하다며 “과오가 있다면 반성하여 청산하고 건설에 매진하면 이는 곳 발전의 길을 전진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원론적인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친일 청산의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날짜 사설에서는 ‘자유 의 선용’이라는 제목으로 되찾은 자유의 소중함을 논하면서 일제기의 친일에 대해 “일본의 폭압은 날이 경과할수록 우심(尤甚)하였고 더욱이 전쟁 당시의 우리는 철쇄에 얼켜진 노예 그것이었다. 한편으로는 그 전쟁 수행에 본의안인 협력을 강제당해야 왜적의 채쭈밧해 우리의 온갖 것을 바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혹독한 억압과 속박에 부단의 투쟁이 계속되었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일제 말기 일제의 강제 속에 친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1945년 12월 8일자 1면에 실린 고정 풍자란 ‘황실수설’도 <동아일보>가 지녔던 입장의 단면을 보여준다. 칼럼은 “당면한 우리의 지상명령은 첫째도 독립 축성, 둘째도 독립 축성 오직 한 길이 있을 뿐”이라면서 이에 장애가 되고 있는 여러 ‘방해자’들을 열거하였다. 독립을 방해하는 이들의 죄는 “과거의 친일보다도 배중(倍重)일지 미지(未知)”라고 끝맺고 있다. 독립을 방해하는 것은 과거의 친일보다 더 중대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1945년 12월 21일자에서는 임시정부의 기자회견 내용 중 친일파와 민족 반역도의 숙청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의 정부가 수립된 후 처단될 것”이라고 임시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1면톱으로 보도하였다.

두 신문의 군정 초기 보도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친일 청산의 기본 원칙에 동의하면서도 과거의 친일보다는 현재의 문제에 더 중점을 두자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두 신문 모두 독립 국가 건설이 최우선의 목표라면서 이에 방해가 되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과거의 친일을 단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었다.

2) 신탁통치 국면에서의 보도 태도

친일 청산 논의가 여러 수준에서 제기되면서 구체화되려던 1945년 12월말 갑자기 날아든 신탁 통치 보도는 순식간에 전국을 반대의 물결로 휘몰아 갔다. 신문들도 좌우익 가릴 것 없이 연일 대서 특필하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이러한 국면에서 친일 청산의 문제는 파문될 수밖에 없었다. 앞의 양적 분석에서 논한 바와 같이 신탁 통치를 주제로 다루면서

친일 문제를 언급한 기사는 <동아일보>의 11건이 검색되었으며 <조선일보>는 한 건도 없었다.

(1)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동아일보> 지면에는 ‘친일’이라는 키워드보다는 ‘민족 반역’이 더 많이 등장하였다. 그 대부분은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 지지로 선회한 좌익의 결정은 민족 반역이고 망국으로 가는 길이며 반탁은 애국이라 의미 부여하는 프레임에 주력하였다. 1945년 12월 30일자는 3면 톱으로 29일 40개 단체가 모여 신탁관리 배격대회를 개최한 사실을 보도하며 그 결의 내용 중 ‘신탁통치 배격운동에 참여 않는 자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를 필두로 1946년 연초 좌익이 모스크바 3상회의 지지로 선회하자 이를 비판, 공격하는 논조는 더욱 거세졌다.

1946년 1월 5일자는 1면톱으로 ‘탁치 지지는 독립 부인’이라는 가로 제목으로 찬탁만이 애국이라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또한 한민당과 국민당이 발표한 성명을 보도하며 인공과 조선공산당의 행위는 ‘3천만의 총의에 역행하는 반역 행위’라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1월 7일에도 1면톱으로 ‘탁치 지지는 독립 부인/민중을 기만·통일분열’이라는 제목으로 강도높게 비판하며 본문에서도 “탁치 지지자는 3천만 민족의 반역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1월 8일자에서는 찬탁은 민족 반역이라는 이승만의 기자회견 발언을 부톱으로 보도하였다. 그밖에도 김창숙의 기고(1946, 1, 7)와 설의식의 칼럼(1947, 2, 11)을 통해 찬탁은 민족 반역이라는 주장을 거듭하였다.

신탁 통치 문제와는 별도로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한 이 시기의 <동아일보> 보도로는 먼저 1945년 12월 30일자 4면에서 김구 주석의 방송 연설 요지를 보도한 것이 있다. 12월 27일의 연설을 통해 김구는 완전 독립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먼저 조국의 완전 독립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여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소(不少)한 협잡 정객과 친일분자 민족 반역자들을 숙청하여야겠습니다. 그것은 대의명분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 그들이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이 다대한 까닭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1946년 8월 29일 국치일을 맞이하여 <동아일보>는 ‘국치일에 제(題)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과거 우리가 식민지로 전락하였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뿌리 깊었던 ‘외세 의존주의의 결과’였다면서 ‘치욕의 이날을 말살하자’며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일정(日政)과 부동하야 동족을 욕되게 하고 괴롭게 하든 악질의 친일반역자 무리, 타력에 의거하야 잔재를 품은 채 현상에 구안(苟安)하려는 배외사대자 계층, 일시의 혼란을 악용하야야

욕을 꿈꾸는 독립방해자 도당 등이 모든 반족적 분자들과 함께 이 날을 우리의 기억과 환경에서 완전히 청소하자. 그리하여야 비로소 명실이 상부하는 자아 광복의 토대가 서고 서광이 빛칠 것이다.” 원론적 차원에서 과거를 극복하자는 입장이라 볼 수 있겠다.

이 시기에는 각 분야의 현안들을 거론하며 일제 잔재를 청산하자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1946년 3월 15일자 사설에서는 경찰제도의 쇄신을 주장하며 “종래 일제시대의 잔재 사상을 일소함으로 종래의 압박 경찰을 선탈하여 민주경찰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11월 9일자의 경찰의 임무를 논한 사설에서도 일제 잔재의 현존을 비판하였다. 같은 해 4월 4일자 과세 문제를 논한 사설에서는 “일제적 잔재를 소탕하는 의미에서 차제에 세계의 자주적인 재편성”을 주장하였다. 이어서 4월 22일자와 5월 21일자 사설에서는 교육의 민주화와 혁신을 위해 일제 잔재를 일소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1946년 12월 1일자의 중간 1년 기념 사설(제목: 사회숙청을 대망)에서는 시국을 돌아보며 “일본적 잔재 숙청이 끝나기도 전에 미소(美蘇)적 미운(迷雲)에 잠겼다”고 당시의 시국을 평가하였다.

(2)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반면 〈조선일보〉는 신탁통치에 대해서 〈동아일보〉와 차별화되는 보도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로 신탁통치 반대를 강력히 주장하면서도 좌익과 우익의 분열을 우려하며 통일된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조선공산당의 입장 선회가 발표된 직후인 1월 3일자에서는 ‘최후의 간두(竿頭)’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일 삼천만의 명하는 통일전선 결성의 대명제를 잠간이라도 잇는다고 하면 이것은 삼천만 민중을 잇는 것이요 우리 정계의 최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통일 전선의 필요성을 강도높게 주장하였다. 이 날짜 2면에서도 면톱에 박스로 ‘삼천만은 통일 염원/반탁에 서로 손을 잡자’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면 한가운데 세로로 ‘전선통일업시 자주독립업다’라는 구호를 크게 게재하였다.

1월 29일자 ‘국제적 안광(眼光)을 가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신탁 통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반감을 선동하여서는 안되었던거와 마찬가지로 3상회의 결정에 대하여도 후견 내지 탁치라는데 의혹을 품은 것이지 반소사상을 전파시켜 조선의 탁치를 마치 어느 일개국의 책임에 돌리려는 일부 불순분자의 책동을 경계하지 안하면 안되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신탁 통치를 소련이 주장했다는 오보를 통해 반소 감정을 자극하여 물고 가던 〈동아일보〉(김영희, 2000, 53쪽)를 중심으로 한 우익 세력들의 빛나간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조선일보> 지면에 나타난 친일 청산 관련 보도로는 1947년 1월 9일자 '일본 색을 업새자'라는 사설을 들 수 있다. 이 사설은 '새나라의 건설은 일제 잔재를 깨끗이 씻어 버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제 잔재에 대한 반발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의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46년 11월 3일자에서는 서울의 한 대학 교수⁶⁾가 대구 10월 항쟁에 대해 현지 조사한 결과 보고서를 전면에 걸쳐 게재하였다. 사건의 발생 배경에 대해 필자는 친일파에 대한 반감과 경찰의 일제 잔재도 주요 요인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외에는 주로 정당이나 사회단체들의 친일 청산 관련 활동을 뉴스로 보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1946년 2월에는 인민위원회(1일자)와 민전(17일자)이 발표한 친일의 범위에 대한 입장을 보도하였으며 그해 하반기에는 입법의원 선거를 앞두고 친일파는 배제한다는 군정당국(10월 17일자)과 좌우합작위원회(11월 1일자)의 발표 내용을 보도하였다. 11월 2일과 8일자에서는 한미공동위원회에서도 친일파 처단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

이 시기 두 신문의 친일 청산 관련 보도는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기보다는 연관된 보도 기사를 통해 다루거나 여러 부문의 현안을 논하면서 과거 청산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형태로 논의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1947년 입법위원의 부일협력자 특별조례에 대한 보도 태도

해방 이후 친일파 숙청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첫 번째 시도는 입법위원의 특별조례였다. 1947년 3월 13일 입법위원에 상정된 특별조례는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켜 여러 차례 수정되는 진통 끝에 1947년 7월 2일 통과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특별조례는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두 신문도 여러 차례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앞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조례 관련 내용을 주제로 다룬 기사는 <동아일보>가 24건으로 11.1%를 차지하였으며 <조선일보>는 17건(34.0%)이 게재되었다. 이 조례 자체가 친일 청산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6) 지면에는 필자명이 김지목(金之牧)으로 되어 있으나 기사 내용에 의하면 이는 본명이 아니라고 한다.

(1)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조선일보〉는 입법의원에서 특별조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바로 1947년 3월 8일과 9일 2회에 걸쳐 ‘부일협력자등 처치법안’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였다. 첫 번째 사설에서는 친일파 처단 문제가 그동안 ‘전민족적으로 절규되어왔고 또 건국 사업의 제1단계 사업이었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며 지금이 이를 논의하기 좋은 시점임에는 틀림없지만 실시는 임시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현재 ‘민주주의적 사회 발전이 저지’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건국과 인과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사설은 간상배 문제를 분리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과거의 친일파들이 현재 모리배로서 암약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친일파 처단 문제 속에 경제적 범행을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친일파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3월 9일자 사설에서는 친일파 처단 문제는 감정보다는 그 교육적 효과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설은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민족만대에 관계되는 사업이며 따라서 건국과 지대한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한 감정에서보다 국민의 교육적 효과에 더 만히 중점이 노여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어서 친일파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거론하며 고위 관직을 역임한 자 등 형식에 얽매이는 규정은 하위 관리 중에도 악질적인 자가 배제되는 등의 세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세부 조항의 수정과 별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복간 이후 〈조선일보〉가 몇차례 보여 주었던 친일에 대한 기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혼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수립 이후에 하자는 것이나 그 범위에 대한 문제 등은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간상배를 따로 다루자는 것은 그동안 두 신문 공히 과거의 친일보다 현재의 반민족이 더 큰 문제라고 했던 주장과 거리가 있다. 어찌 보면 이 조례에 간상배 문제가 포함된 것은 당시 두 신문을 비롯하여 우익 진영에서 이러한 주장을 해 왔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막상 함께 포함하니 이번에는 따로 다루자는 반대의 주장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관련 기사는 조례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의 경과와 내용을 소개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947년 4월 16일자 2면에서는 경성법조회가 견해를 발표한 것을 좌측 상단에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부일협력자 처단안/법조회에서 견해 발표’라는 제목으로 법조회가 친일파의 범위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보도하였다.

한편 군정장관의 인준 거부로 이 특별 조례가 무산되자 〈조선일보〉는 1947년 11월 30일자 사설에서 ‘인준거부와 입의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사설은 군

정장관의 인준 거부가 관련 법 조항에 명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전해 러취 군정장관이 했던 발언과 전면 배치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러취가 말하기를 군정장관의 거부권 행사는 단 세가지 경우 즉 미군 철수 결의나 미곡의 수집은 미국이 그 배급은 조선이 한다는 결의, 그리고 조선의 경제 사정과 거리가 멀어 실시가 어려운 결의의 세가지만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공언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며 비판한 것이다.

(2)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

특별조례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는 대부분 법안이 상정되고 토의되는 과정 그리고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이 중심이었다. 1947년 3월 12일자에서는 조례와 관련하여 한독당 선전부장 엄우룡이 기자 회견한 내용을 1단으로 보도하였다. 기사에 의하면 그는 “해방 이후 그동안 친일 규정을 주장한 것은 좌파요 우익은 정부 수립 후에 하자는 주장이었다”면서 금번 입법위원회에 제안된 친일 규정은 ‘민족 실정을 망각한 관념론’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1947년 4월 15일자도 특별조례에 대한 경성법조회의 건의를 2면의 톱기사로 보도하였다. 경성법조회는 친일파에 대한 조치는 공민권 제한 정도로 하고 처벌은 정부 수립 후에 하자고 주장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법조회의 발표 내용을 중립적인 제목으로 전달하는 형식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동아일보>의 보도는 자사의 입장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을 부각시키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소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실시 연기론의 자세를 비추다가 법안이 상정되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였다. 1947년 4월 30일자 사설을 통해 <동아일보>는 ‘부일 협력자등 처단문제를 논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별조례로 논란이 많은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되니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였다. 사설에서 <동아일보>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중대한 과업 앞에서 우리는 “증오의 감정과 분노의 정신에만 사로잡혀서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경계”한다고 주장하였다. 특별조례 안이 수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범죄주의 정신’과 ‘극단론’에 바탕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미군정하에서 외력을 빌어 죄인을 처단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에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 조례가 실행된다면 수십만의 인사가 죄인으로 낙인찍혀 ‘이땅은 진공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과도적인 입의는 그 본래의 성질에 비추어 교량적 임무를 완수함에 힘쓸지오. 이 민족의 역사적 대업은 우리의 정식 정부가 수립된 후일”에 추진하자고 맺고 있다.

같은 날짜 1면의 하단에서는 여러 입법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소개하며 ‘친일파 처단 감정은 금물’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기사 본문에 따르면 이는 당시 독촉 계열로 알려진 양 제박의원의 발언에서 따온 것이었다. 그는 친일파 처단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지나친 제재는 혼란을 야기하여 건국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니 감정에 흐르는 처단론은 금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1947년 하반기 군정장관의 인준 거부로 이 특별조례가 무산되자 <동아일보>는 군정청의 입장을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1947년 11월 29일자에서 1면 톱기사로 ‘삼권분립의 민주정치에 이상! 군정하라도 민족의사존중하라’는 가로 제목으로 대서 특필하였다. 기사에서는 경과와 입법위원의 대응을 소개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한다면 민의를 받어서 입법하는 것보다도 군정수뇌의 뜻을 맞추는 입법이 될 것이니 입의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사태의 수습에는 군정당국의 냉정한 자기반성이 요청”된다고 주장하였다. 입법위원의 논의 과정에서는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로 상황에 따라 소극적 및 적극적 비판의 입장을 견지하며 실시 연기를 주장하다가 군정 당국이 인준을 거부하자 태도를 돌변하여 그 절차와 형식을 문제삼으며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다.

이처럼 입법위원의 특별조례로 친일 청산이 구체화될 계기를 맞자 두 신문은 모두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원칙에 찬성한다면서도 그 실시를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군정당국에 의해 무산되자 군정당국을 비판한 것도 두 신문 모두 마찬가지였다.

4) 1947년 제2차 미소공위에 관한 보도 태도

1947년에는 제2차 미소공위의 협의 대상 단체 문제를 둘러싸고도 커다란 논란이 벌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친일 세력을 중심으로 한 우익 정당과 단체의 공위 참여 문제였다. 전술한 대로 우익 세력은 공위에 적극 참여를 표방하면서 협의 대상 단체에 대거 지원하였다. 이에 대해 좌익 세력들은 친일 반탁 세력이 공위를 무산시키려는 공작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도 입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2차 공위도 1947년 10월에 결렬되고 말았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과정에서 당시 좌익 신문들은 친일 반탁 세력의 참여에 강하게 비판하고 반대하며 지면을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이슈화하였다(예컨대 광명일보, 1947, 7, 8; 민주일보, 1947, 7, 9; 우리신문, 1947, 7, 9; 전국노동자신문, 1947, 7, 18; 독립신보, 1947, 7, 23 등). 하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이 문제를 거의 외면하였다. 공위에 대하여 일상적인 보도는 하였지만 친일파의 참여 문제로 논란이 벌어진 사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양적 분석에서도 친일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공위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 7건(3.2%), <조선일보> 1건(2.0%)에 불과하였다.

(1) <동아일보>의 보도 태도

<동아일보>는 공위 참여 단체 문제에서도 우익의 입장만을 대변하였다. 1947년 6월 10일 공위 참가에 관해 한국민주당이 성명을 발표하자 <동아일보>는 6월 15일 사설을 통해 ‘민족진영의 적극성’이라는 제목으로 우익 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주장하였다.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그 내부에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요지의 한민당 성명을 <동아일보>는 ‘자주적 태도를 표명’한 것이며 이로써 ‘적극적 진군에의 제1보가 발족된 동시에 불패의 진용이 정비되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였다. 이어서 “잘되면 남북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요 안되면 남조선 과도정부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단독 정부의 가능성까지 언급하였다. 이어 6월 21일과 22일에는 공위 참여 문제에 대해 적극 참여를 주장한 장덕수의 칼럼을 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동아일보>는 1947년 8월 15일자에서 해방 두 돌을 맞아 ‘진정한 해방을 찾자’는 제목의 사설에서도 공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소련이 공산 정부를 수립하려는 의도가 확실했던 반면 미국은 ‘우리의 진로에 대한 확호한 신념을 가지고 못한’ 때문이라며 우리 스스로 통일과 독립을 모색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이 원칙에 입각할 때 우리는 “미국의 동정과 원조를 더욱 신뢰할 수 있고 소련의 착오와 실책을 문득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라며 “공위가 성공하면 조커니와 그러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담 실망할 것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의사에 물어 우리의 정부를 수립”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공위의 성공보다는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간다는 당시 미군정이나 우익 세력의 방침(이완범, 2007, 150쪽)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1947년 6월 12일자에서는 공위가 참가 신청 단체에 보낸 서면 질의서의 내용을 보도하고 이어 7월 4일과 8일에서는 이 질의서에 대해 한국민주당을 필두로 170여개 우익 정당과 단체가 연합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가 보낸 답변서를 2회에 걸쳐 게재하였다. 질의서 내용 중 친일의 규정과 청산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항목에 대해 <동아일보>가 보도한 우익 단체들의 답변서는 ‘일제 잔재의 영향이 사회 각 부문에 뿌리 깊게 존재하므로 각 분야 민주적 정책을 실시하여 점진적으로 청산한다’는 기본 입장과 함께 ‘민중의 원성이 높은 악질 친일분자에 한해 임시정부에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1년 이내에 처단케 한다’고 서술하였다.

<동아일보>는 미소의 대립되는 입장 중 미국을 일방적으로 뒷받침하였다. 1947년 8월 3일자 사설에서 ‘위기에 직면한 공위’이라는 제목으로 그간 협의 대상 단체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소련측은 반탁 24개 정당의 제외를 주장하여 양보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다. 미국측은 그에 대하여 신 제안을 행하여 절충에 절충을 거듭하여 왔었다. 그리

하였으나 소련측에서는 자기네 주장을 절대 고집하여 조금도 양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한편 〈조선일보〉는 미소 공위의 재개 논의가 시작되자 1947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소련의 공위재개 제안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공위의 성공을 기원하며 이를 위해 미소 양국과 우리 국민들에게 당부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1차 실패로 끝난 공위가 양측의 입장 조율로 재개되어 여기서 한국의 신탁 통치와 독립, 통일에 관한 중대사가 논의, 결정되니 만큼 이에 대한 당시 한국 사회의 기대는 대단히 높은 것이었다. 이러한 점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는 4월 24일자 사설(제목: ‘소련의 공위재개 제안에 대하여(一)’)에서 “양국의 가장 성실한 성과를 최상급의 표현으로 기대코저 하는 것이다”라고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5월 15일자 ‘미소공위의 재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미소 양국의 절충을 위하여서 우리의 태도 여하가 공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협의 대상의 범위 문제와 관련하여 “공위 자체보다도 우리의 정당 단체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소 대표간 논의에서 언급한 범위에 “제한받기를 원치않는 정당 단체가 많다고 하면 공위의 성공은 전혀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는 중대한 결심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소 공위가 참가 단체에 보낸 서면 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조선일보〉도 1947년 7월 8일자 지면에 소개하였다. 전술한 대로 〈동아일보〉가 우익 진영의 답신 내용을 보도한 데 반해 〈조선일보〉는 양 진영의 답변 개요를 요약 보도하였다. 이 기사는 친일 청산에 대해 “우익 급 중간층에서는 대상 범위를 계급적 정치적 투쟁을 혹은 보복적 계급 추방을 대상으로 함을 불허하며 민중의 원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점진적으로 임정 수립 후 1개년 이내에 처벌 숙청한다 하였으며 좌익측에서는 특별기관을 설치하여 엄격히 철저히 시급한 기일 내에 처벌 숙청하되 관공직으로부터 축출 선거권 박탈 정치운동으로부터 추방할 것을 주장”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공위의 협의 대상 단체를 제한하자는 이슈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전반적으로 우익 중심의 보도에 치중하면서도 좌익 정당들의 주장도 가끔 보도하였다. 1947년 6월 3일자 1면 하단에 1단으로 ‘친일파 민족반역자의 집단 급 공위사업을 방해하는 정당 급 사회단체는 제외’하자는 남로당의 주장을 보도하였다. 이어 6월 19일자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한 근로인민당의 주장을 1단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도 당시 좌익이 주장했던 핵심적 내용, 즉 과거의 친일 세력이 신탁 국면에서 반탁 애국 진영에 참여하여 변

신을 시도했던 측면(박명립, 1996, 148쪽)은 부각시키지 않고 친일파와 공위 반대를 구분하여 보도하였다.

결국 공위에 대해서는 두 신문의 보도 태도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동아일보>는 철저하게 우익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반면 <조선일보>는 우익의 입장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좌익의 주장에 대해서도 단신으로 보도하는 차이를 보였다. 공위에 대한 기본 입장에서도 두 신문의 차이는 두드러져 <동아일보>는 이미 단독 정부 수립 방침을 정하고 있던 우익의 입장을 대변하며 공위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하면 단독 정부로 가면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조선일보>는 공위의 성공에 매우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동아일보>가 우익의 핵심인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었던 반면 <조선일보>는 단선 단정에 반대하는 김구 세력의 입장을 대변(박용규, 1988, 66쪽)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어떠한 보도 태도를 보였는지를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규명해 보았다.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지면에 나타난 친일 청산 관련 보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1945년 하반기에 복간한 두 신문은 초기부터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임하면서 과거의 친일보다는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하였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조선일보>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었다. <조선일보>도 친일 청산에 대해 조심스럽기는 하였지만 사실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하였으며 다른 정당이나 단체의 관련 활동도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반면 <동아일보>는 직접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았으며 주로 다른 관련 기사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는 형태였다.

이후 정치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두 신문의 보도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1945년 12월말부터 몰아친 신탁 통치 국면에서 친일 청산이라는 이슈는 파문히고 말았다. 그해 11월 조선신문기자회 경남지부에 의해 언론계까지 포함한 친일 청산이 구체화되려던 단계였으나 신탁 통치 문제가 전국을 강타하면서 스러지고 말았다.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해서도 두 신문은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반탁은 애국이고 찬탁은 매국이라는 프레임으로 대립 국면을 조성하는 보도에 매우 적극적이었으나 <조선일보>는 반탁의 입장에 서면서도 이를 위해 대립보다는 전선 통일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 이 대립

국면에서 친일 세력들은 반탁 진영에 합류하여 좌익을 민족반역이라고 공격하며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다.

1947년의 입법의원 특별조례에 대해서는 두 신문 모두 실시 연기론의 입장이었다. 많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니 친일 청산의 절차를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정 당국이 인준을 거부하여 조례가 무산되자 두 신문은 군정 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947년의 정국을 휘몰아쳤던 제2차 공위에 대해서는 두 신문의 보도 태도가 차이를 보였다. 당시 좌익 세력은 친일파들로 구성된 우익 세력이 공위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지만 두 신문에서는 이러한 보도는 <조선일보>만이 좌익의 동향과 입장을 간략하게 보도하였을 뿐이다. 공위 자체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당시 우익의 입장만을 대변하며 공위가 실패하면 단독 정부 수립으로 가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조선일보>는 큰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미군정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과거의 친일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민족이 더 중요하며 청산의 시기를 정부 수립 이후로 미루자는 것이 두 신문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친일을 청산하려면 그 대상 설정도 매우 어렵고 인재의 공백이 우려되어 당면 목표인 독립 국가 건설에 장애가 되니 정부 수립 이후로 연기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기초 속에서 두 신문이 신탁 통치나 공위 등 주요 이슈에서 다소 차별화된 보도 태도를 보였던 것은 두 신문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로 볼 수 있다. 잘 알려진 대로 <동아일보>는 우익의 핵심 세력인 한민당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조선일보>는 임시 정부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이에 따라 신탁 통치나 제2차 공위에 대해서 <동아일보>는 철저히 우익 세력을 대변하였으며 <조선일보>는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로서 신탁 통치에 대해서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전선 통일이 중요하다는 논조에 치중하였으며 공위의 성공에도 많은 기대를 걸었다.

서두에서 밝힌 대로 이 연구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두 신문이 일제기의 친일 행적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표적 언론으로 위상을 굳히며 오히려 민족지 신화를 만들어 가게 된 과정을 규명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초창기라 할 미군정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앞으로 정부 수립 이후에 두 신문이 친일 청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강만길 (1984). <한국현대사>. 서울: 창작과비평사.
- 강양욱 (1988). <일제하 언론의 광고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광명일보 (1947, 7, 8). 공위 협의대상. 1면
- 길진현 (1984). <역사에 다시 묻는다 : 반민특위와 친일파>. 서울: 삼민사.
- 김동민 (2010).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52집, 135-153.
- 김영희 (2000). 미군정기 신문의 보도 경향: 모스크바 3상회의 한국의정서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4권 4호, 32-60.
- 김을한 (1975). <한국신문사회>. 서울: 탐구당.
- 김현대 (1987). <일제하 동아일보의 민족운동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URL: <http://newslibrary.naver.com>
- 독립신보 (1946, 11, 12). 친일파 문제는 차후로. 1면
- 독립신보 (1947, 7, 23). 스 대장 소의 정당성을 내외에 천명. 1면.
- 문화일보 (1947, 7, 1). 공위 방해의 새로운 흉모. 1면 사실.
- 민주일보 (1947, 7, 9). 논의의 협의대상 문제 수일내 해결 기대. 1면.
- 민주중보 (1945, 12, 11). 기자회견에 일언. 1면 사실.
- 박명림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 서울: 나남.
- 박용규 (1988). <미군정기 한국 언론구조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용규 (2007). 미군정기 언론인 단체들의 특성과 활동.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135-162.
- 박태균 (1993). 해방 후 친일파의 단정·반공운동의 전개. <역사비평>, 25호, 182-193.
- 배진한 (1988). <1920년대 조선·동아 두 신문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동주 (1987). 해방후 좌익운동과 민주주의민족전선. 박현채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3> (76-139쪽). 서울: 한길사.
- 우리신문 (1947, 7, 9). 반탁친일분자 배제코 혼란과 파렴치를 광정하라. 1면.
- 이강수 (2003). <반민특위 연구>. 서울: 나남.
- 이승엽(1947, 6, 19). 한민당 성명을 비판함. <노력인민>, 3면.
- 이완범 (2005). 조선공산당의 탁치 노선 변화 과정(1945~1946). <한국근현대사연구>, 35집, 189-225.
- 이완범 (2007). <한국해방3년사>. 서울: 태학사.
- 이준식 (2005). <일제하 친일언론 인식 문제의 현황과 과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 장신 (2005). 1930년대 언론의 상업화와 조선·동아일보의 선택. <역사비평>, 70호, 164-196.
- 장신 (2009). 일제말기 김성수의 친일 행적과 변호론 비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2집, 271-313.
- 정용욱 (2003).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미군정의 여론공작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62호, 287-322.

- 전국노동자신문 (1947, 7, 18). 대한노총 테로를 조종하는 자, 한민 한독 유명 제외하라. 1면.
조선일보 아카이브. URL: http://srchdb1.chosun.com/pdf/i_archive/
조선중앙일보(1947, 7, 8). 친일파 모리 반탁 유명단체 배제하라. 1면.
중앙신문 (1945, 12, 10). 이런 자가 반역자다/독립협회서 규정 발표. 2면.
중앙신문 (1946, 2, 2). 친일파와 반역자. 1면.
채백 (2008). <사라진 일장기의 진실: 일제 강점기 일장기 말소 사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채백 (2012). <부산언론사 연구>. 부산: 산지니.
채백 (2015). <한국언론사>. 서울: 컬처룩.
최민지 (1978).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서울: 일월서각.
최영태 (2004). 조선일보 폐간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 <역사비평>, 66호, 216-241.

투고일자: 2016. 7. 26. 게재확정일자: 2016. 9. 22. 최종수정일자: 2016. 9. 25.

The Coverage on the Settlement of pro-Japanese Koreans by *Dongailbo* and *Chosunilbo*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Baek Cha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verage on the settlement of pro-Japanese Koreans by *Dongailbo* and *Chosunilbo*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 266 related articles of two newspapers searched by 6 keywords were analyzed quantitatively. And the qualitative analysis on the coverage of related issues were supplemented. Generally two newspapers can be evaluated as passive on the pro-Japanese issues. They said that anti-national activities of that time which might be an obstacle to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ation even more critical than the pro-Japanese activities in the past. In addition they suggested to suspend the settlement of pro-Japanese Koreans after the establishment of Korean Government, because the settlement might cause a big confusion and a vacuum of personnel. On some issues the distinction between two newspapers derived from their political orientation were revealed. *Dongailbo* represented the standpoint of the rightists fully and *Chosunilbo* revealed relatively balanced coverage.

KEYWORDS Media History, Dongailbo, Chosunilbo, Pro-Japanese, U.S. Military Government Period